

5·18기념식 정치권 광주 총출동...통합 메시지 나올까

국힘 KTX 특별열차 편성 광주행 김재원 정계 광주정신 계승 강조 잇단 악재에 민심 심상찮은 민주 반성·성찰·혁신 메시지 내놓을 듯

오는 18일 광주에서 열리는 제43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여야 정치권이 총출동할 예정인 가운데 분열과 갈등의 시대를 타개할 국민통합의 메시지가 마련될 것인지 주목된다.

특히, 윤석열 정부 출범 1년이 지났지만 민생은 실종되고 정쟁만 난무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5·18 민주화운동 43주년 기념식이 여야 정치권에 반성과 성찰을 통한 협치와 상생의 계기가 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우선 여당인 국민의힘은 김기현 대표를 비롯해 지도부와 의원들이 KTX 특별열차를 타고 18일 오전 광주를 찾을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이날 광주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연 뒤 국립 5·18민주묘지에서 열리는 기념식에 참석한다.

최근 '5·18 정신 헌법 수록 반대' 등의 설화를 빚은 김재원 최고위원에 대해 차기 총선 출마의 길을 봉쇄한 당원권 정치 1년이라는 강력한 징계를 내린 국민의힘은 '광주 정신'에 대한 진정성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이제 국민의힘에 '광주정신 편입'은 발 붙일 수 없다는 의지가 반영된 견고한 서진 정책을 통해 호남은 물론 수도권 호남 민심 잡기에 나선다는 것이다.

지난해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이 올해도 광주를 찾았는지도 관심사다. 윤 대통령이 올해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을 찾다면 국민 통합 메시지와 광주 발전 계획 등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도 전체 의원이 광주를 찾는다. 하지만, 발길은 가볍지 않다.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는 물론 지난 전당대회에서의 동 봉투 사건에 이은 김남국 의원의 코인 투자 논란 등 각종 악재로 민주당이 몸살을 앓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반영하듯, 민주당의 핵심 지지 기반인 호남 민심은 심상치 않다. 실망감을 넘어 아예 관심을 두지 않는 분위기

다. 최근 실시된 각종 여론조사 결과, 호남의 민주당 지지율은 갈수록 하락세 흐름을 보이고 있고 무당층 비율도 급격히 늘고 있다. 지역 정치권에선 민주당이 대선 패배 이후, 달라진 모습보다는 기득권 구조에 안주하고 있다는 점에서 5·18 기념식에 참석할 자격도 없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반성과 성찰의 메시지 마련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김남국 의원이 코인 투자 논란으로 14일 민주당을 전격 탈당한 것도 심상치 않은 호남 민심을 고려한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하지만, 사법리스크에 발목을 잡힌 이재명 지도부가 육참골단의 뼈를 깎는 혁신의 방안을 내놓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이번 5·18 기념식이 민주당에 또 한 차례의 통과 의례로 전락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는 배경이다.

광주지역 민주당 관계자는 "대선, 지선 패배와 윤석열 정부의 실정에도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민주당에 대해 지역 민심의 실망감은 갈수록 깊어지고 있다"며 "민주당이 5·18 영령들 앞에 제대로 된 혁신의 의지와 방안을 내놓지 못한다면 내년 총선 승리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오는 17일에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전임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국립 5·18민주묘지를 참배한다. 참배에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강기정 광주 시장이 함께 할 것으로 알려졌다. 문 전 대통령은 재임 기간 세 차례 5·18 국가 기념식에 참석한 바 있다.

정의당은 17일 전야제에 이어 18일 열리는 기념식에 참석할 예정이다. 정의당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치적 존재감이 갈수록 약해진다는 평가를 받고 있어 5·18 민주화운동 43주년 기념식을 기점으로 다시 시작한다는 각오다. 특히, 개혁적 색채가 강한 호남 민심이 민주당에 강한 실망감을 보임에 따라 정의당 특유의 강력한 진보적 메시지로 광주 정신을 강조하며 활로를 개척한다는 방침이다.

정치권 인사는 "윤석열 정부 1년 동안 정치권에선 협치가 실종되고 정쟁만 난무했다는 점에서 이번 5·18 민주화운동 43주년 기념식의 화두는 '반성과 성찰'이 돼야한다"며 "하지만 여야 거대 정당이 적대적 공생관계에 안주하고 있다는 점에서 과연 국민이 공감할 통합의 메시지가 마련될 것인지에 의문"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14일 서울 종로구 총리 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 앞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위해 이동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 한덕수 국무총리,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 김기현 대표, 박대출 정책위의장. /연합뉴스

한일 12시간 마라톤 협의...후쿠시마 시찰단 나흘 일정 방일 합의

시찰 항목 등 세부 사항 추가 협의

한일 양국이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오염수 현장에 대한 한국 전문가 시찰단의 일본 방문을 나흘 일정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그러나 시찰 프로그램의 세부 사항은 조율이 마무리되지 않아 추가 협의를 조속히 갖기로 했다. 한일은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국장급 협의를 갖고 후쿠시마 현장 시찰단 파견의 구체적 사항을 논의해 이렇게 합의했다고 외교부가 지난 13일 밝혔다.

협이는 전날 오후 2시 15분께 시작돼 이날 새벽 2시께 끝났다.

양측은 12시간에 걸친 '마라톤' 회의에서 한국 측의 상세한 제안사항을 바탕으로 시찰단 파견 일

정, 시찰 항목들을 포함한 활동 범위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외교부는 "자정 넘겨까지 이어진 회의에서 양측은 우리 시찰단의 조속한 방일을 실현하기 위해 적극적이고 진지하게 협의에 임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한국 전문가 시찰단의 방일은 이달 23~24일을 포함한 3박 4일간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애초 4~5시간 정도 진행될 것으로 예상됐던 회의가 장장 12시간 가량 진행된 것은 시찰단이 접근할 시설의 구체 항목과 제공받을 정보 등을 놓고 줄다리기가 이어졌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이번 회의는 외교부 윤현수 기후환경과학외교국장장과 일본 외무성 기이후 아쓰시 군축불확산과학부장이 수석대표를 맡고 양측 관계부처가 참여했다.

한국에서는 국무조정실·원자력안전위원회·해양수산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부처가 참석했으며, 일본 측은 외무성·경제산업성이 대면 참석하고 원자력규제위원회(NRA)와 도쿄전력이 화상 참여했다.

정부는 이번 시찰을 통해 일본의 방사능 핵종 분석 역량과 오염수 정화 시설인 다핵종제거설비(ALPS) 및 방류시설 운영 상황 등을 직접 파악해 해양방류 과정 전반의 안전성을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일측은 한국이 요구한 시찰 항목 등을 국내에서 추가로 검토한 뒤 다시 협의에 임할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 당국자는 "조속히 실무자간 화상회의를 통해 추가 협의를 해 시찰단 방일 관련 필요한 사항들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윤 대통령 국정 지지율 2%p 올라 35%

갤럽 조사...부정평가 59%

윤석열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 지난 주보다 올라 30%대 중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갤럽이 지난 9~11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전화 조사한 결과 윤 대통령 직무수행 긍정 평가는 35%, 부정 평가는 59%로 나타났다. 긍정 평가는 직전 조사(2~4일)보다 2% 포인트(p) 올랐다. 30%대 지지율은 4월 3주 조사(4월 18~20일)부터 4주 연속 이어지고 있다.

윤 대통령 직무수행 부정 평가도 직전 조사보다 2%p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

지난 7~8일 방한한 기사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윤 대통령의 한일정상회담에 대해서는 49%가 '성과가 없었다'고 평가했다. '성과가 있었다'는 응답은 33%, 의견 유보는 18%였다.

정당 지지율은 국민의힘이 35%, 더불어민주당이 32%를 각각 기록했다. 두 당 모두 지난 조사와 지지율이 동일했다.

이번 조사의 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서 ± 3.1%p다. 무선(95%)·유선(5%) 전화 면접 방식으로 진행됐고 응답률은 11.0%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연합뉴스

尹, '간호법 거부권' 당정 건의 수용할 듯

내일 국무회의 의결 전망

윤석열 대통령이 간호법 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거부권 행사)가 불가피하다는 정부·여당의 건의를 수용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14일 알려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언론과의 통화에서 "매듭을 지어야 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고 말했다.

그동안 윤 대통령은 당정이 마지막 순간까지 중재 노력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원론적 입장을 가진 채 여야 협상 추이를 주시해왔다.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 공관에서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윤 대통령에게 간호법 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를 건의하기로 했다.

이와 별도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도 15일 간호법 제정안이 관련 직역 간 갈등을 심화시키고 의료현장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를 윤 대통령에게 보고할 예정이다.

간호사 처우 개선 등을 위한 법·제도 정비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국민을 갈라치는 정치적 입법

은 정당한 방식이 아니라는 데 당정 의견이 일치하는 분위기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은 오는 16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이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 건을 심의 의결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국민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의료인들의 유기적인 '협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데 방점을 찍은 대국민 메시지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간호법은 간호사 업무 규정을 별도로 분리해 간호사의 자격·처우 등의 개선을 골자로 하고 있으며, 지난달 27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연합뉴스





반값으로 내 집 마련?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이 워길래?

땅값은 빼고 건물값만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이란, 토지는 공공이 보유하고 건물만 분양해 분양가를 반으로 줄인 주택입니다.



주택가격(40-60%)
합리적인 분양가



25%이상 100%
믿을 수 있는 후분양



3년 주회
주거사다리



백년 동안의 안정적인
고용성 주택연금

조금 더 합리적으로
서울 삽니다

